

---

#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

---

2018. 12. 24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## 목 차

<b>I. 추진 배경</b>	<b>1</b>
<b>II. 자영업자 금융 여건 진단</b>	<b>3</b>
<b>III. 추진 방안</b>	<b>4</b>
1.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	5
2.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	6
3.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	9
4.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	11
<b>IV. 기대효과</b>	<b>12</b>
<b>V. 향후계획</b>	<b>12</b>

## I. 추진 배경

□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큼

- \* '18.11월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명으로, 전체근로자의 약 25%를 차지
- \* 자영업자 비중('17년, %) : (한국) 25.4 (일본) 10.4 (독일) 10.2 (미국) 6.3

□ 그러나, 자영업은 경쟁심화, 비용부담 가중, 경영여건 변화(대형화·정보화) 등으로 “다산다사(多産多死)”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

- \* '16년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률 및 폐업률은 각각 18.2%, 13.9%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중에 1명이 폐업하는 상황

□ 금융부문 자영업자 지원은 양적 측면에서 증가\*해 오고 있으나, 자영업 부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재적소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금융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

- \* 소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(조원) : ('15말)274 ('16말)307 ('17말)354 ('18.9말)390

○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대하여 ①담보 의존\*, ②특정 업종으로의 쏠림\*\*, ③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대한 묻지마식 대출, ④재기를 어렵게 하는 관행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옴

- \* 담보부대출 비율(금액기준, %) : ('15말)68 ('16말)70 ('17말)73 ('18.9말)74

- \*\* 업종별 대출액 비중('15말→'18.9말 잔액기준)  
(부동산업·임대업) 33→40% (제조업) 19→15% (도·소매업) 16→14%

○ 금융권의 자영업 대출행태가 자영업자들이 '특정분야로 과잉 진입하고 단기간에 폐업'하는 양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존재

⇒ 자영업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이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,

- 자영업을 효과적으로 지원·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## 참 고

##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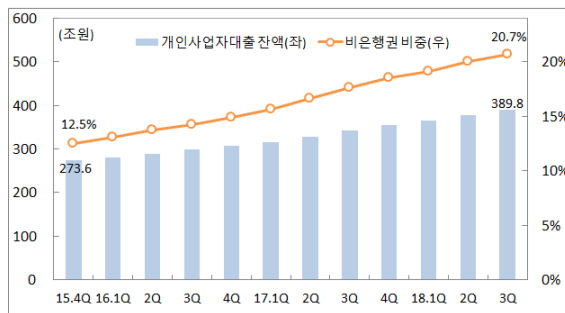
※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①협의(개인사업자대출)의 대출, ②광의(개인사업자대출+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)의 대출 존재 → 이하에서는, 각 금융회사가 실제 집계·관리하는 협의(개인사업자대출) 기준으로 분석

□ (대출 규모) **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'18.9월말 기준 389.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9% 증가**

○ 업권별로는 **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**

\* 업권별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, '18.9월, %) : (상호금융)38.0 (저축은행)37.6 (은행)9.6

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



\* 자료 : 금융감독원

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



\* 자료 : 금융감독원

□ (업종별 대출액) **금융권의 업종별 대출 비중('18.9월 기준)은 부동산·임대업(39.6%), 제조업(15.4%), 도·소매업(14.3%) 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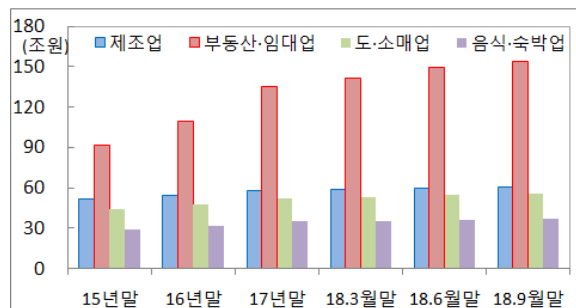
○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·임대업으로의 편중이 심화

\* 업종별 대출액 비중('15.9월→'18.9월 잔액기준)

(부동산·임대업) 33→40% (제조업) 19→15% (도·소매업) 16→1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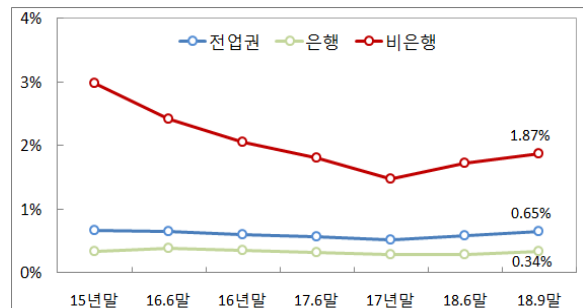
□ (연체율) **'18.9월말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.65%로 '17년말(0.51%)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세**

금융권 업종별 대출잔액



\* 자료 : 금융감독원

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



\* 자료 : 금융감독원

## II. 자영업자 금융 여건 진단

### ①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 부족

-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, 사업체의 사업성·재무정보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부족
- 이에 따라, 대출 취급시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, 담보·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

\* 담보별 비중(% , '18.9월) : 담보대출 74.4, 신용대출 16.8 보증부대출 8.8

- 자금도 담보 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·임대업으로 몰리는 경향

### ②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,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부족

- 자영업자에 특화된 별도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한 상황
- 금융 부문에서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생존율을 높이려는 컨설팅 제공 등이 부족

### ③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실패 후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

-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, 사각지대\* 존재

\* 음식·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,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

-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확률이 높음에도 재창업 여건은 불리

\* 생존율(% , 재창업자 / 전체) : (1년) 97.2 / 59.8 (5년) 73.3 / 30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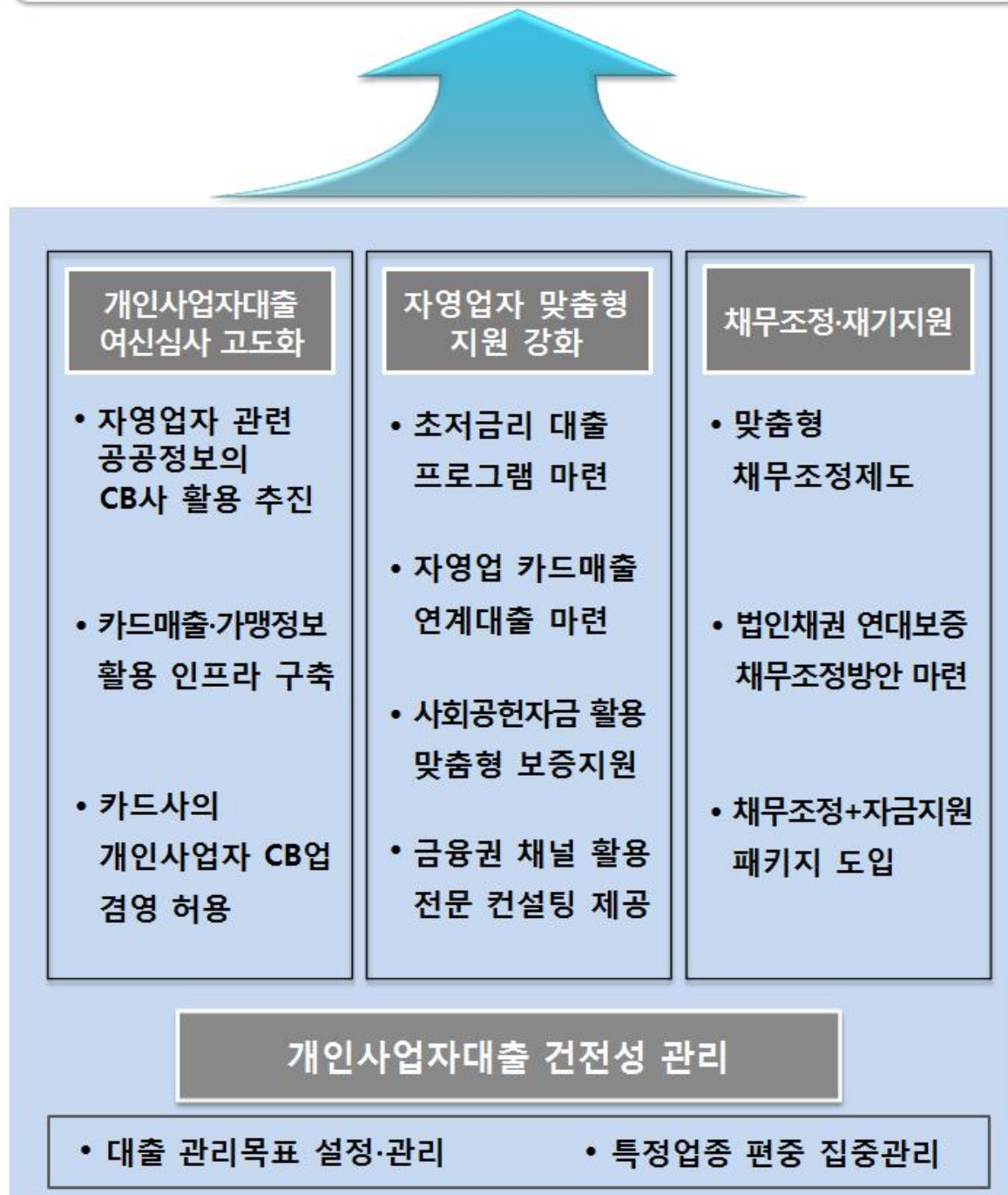
### ④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건전성 관리 필요성 증대

- 자영업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대출 급증세나 업종 쏠림이 지속될 경우, 건전성 저하 소지 상존

### Ⅲ. 추진 방안

#### 《 기 본 방 향 》

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



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①신용조회회사(CB사)의 신용평가 및 ②자체 심사모형을 활용하나,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업성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
  - ① CB사는 대표자 개인정보와 사업체 정보를 모두 제공하나, 사업체 정보의 경우 사업성을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고 개인 정보와의 매칭도 불완전하여 활용도가 낮은 편
  - ②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모형 역시 사업체 정보 보다는 대표자 개인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
- 대출 심사시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상 1~6개월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의존함에 따라,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
  -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정보의 경우 사업체의 일별·월별 최신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어 잠재적 가치와 유용성이 크지만, 금융회사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

## 나. 대응 방안

### ①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\*의 CB사 활용 추진

\*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(예 : 사업자등록번호 등)가 포함

- CB사 보유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의 매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적개선 가능

※ 공공데이터 공개·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·행안부·복지부 등과 협의중

②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·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

①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

\*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기초한 매출액을 기초로 소득을 추정 하였으나, 향후 카드매출액을 통해서도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

② 금융회사-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하여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

\* (예) BC카드는 대출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한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중 → 신한은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동 정보를 활용한 대출 실행

③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

\* 「신용정보사업 선진화 방안('18.11월)」 기발표사항

-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,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쏠카드사에 축적되고 있어 유용성이 큰 신용정보 생산 가능

2

**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**

① 「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」 (기업은행, 1.8조원 규모, '19.1분기중 출시)

- 금리산정시 가산금리\* 없이 기준금리(KORIBOR\*)만을 부과

\* 가산금리 항목 : 신용·리스크·유동성 프리미엄, 마진, 자본비용 등

\* KORIBOR :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'18.12.21일 기준 1.99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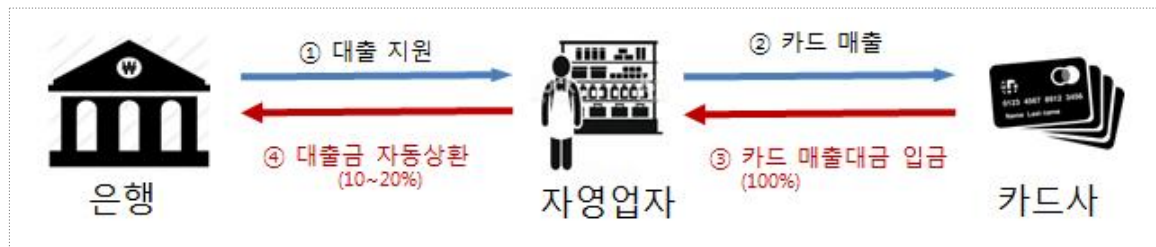
- 금리가 2% 수준으로 인하되면,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



② 「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」 (기업은행, 2,000억원 규모, '19.1분기중 출시)

-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, 이에 기초하여 대출한도를 부여
  - 담보·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가능
-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(10~20%, 사전 약정)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

카드매출 연계대출 개요



③ 은행권 사회공헌자금(500억원)을 활용하여 보증비율·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시행(6,000억원, 신·기보, 19.1분기중 출시)

\* 일자리협약보증 재원중 500억원을 신·기보 보증재원으로 활용

① 사업실패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\* →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

\*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중 재도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·기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(3-③에 의한 채무재조정자중 신·기보 심사위원회 통과자에 대해서도 지원)

- 보증비율을 우대(85%→90~100%) 및 보증료 인하(1.5%→0.5%~1.2%)

② 창업초기로서 성장이 정체\*된 자영업자 → 데스크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도입

\* 창업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 하회

- 보증비율을 우대(일반 85%→특례 95%) 및 보증료 인하(1.5%→1.2%)

③ 기타 자영업자 →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 도입

- 보증비율을 우대(일반 85%→우대 90%) 및 보증료 인하(1.5%→1.2%)

### 신·기보의 자영업자 보증지원 방안(안)

구 분	지원대상	지원규모*	지원내용
재기지원	사업 실패 이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	300억원	- 보증비율 90%~100% - 보증료율 0.3%p~1%p 인하
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	창업 초기 영업 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	1,200억원	- 보증한도 1억원 - 보증비율 95% - 보증료율 0.3%p 인하
자영업자 우대보증	정상 영업중인 자영업자	4,500억원	- 보증한도 3억원 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율 0.3%p 인하

- \* 1) 자영업자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 
2) 재기지원의 경우 한도소진 이후에도 자체자금으로 지원 지속

#### 4 금융권 채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제공

##### ① 컨설팅 연계 자영업자 지원체계의 안착 유도

- 은행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선정하고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컨설팅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('18.12.3일 시행)
- '19년 상반기중 컨설팅 성과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금리우대·정책자금 제공 등 지원 확대

##### 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(미소금융, 햇살론 등)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전(대출신청시)·사후 컨설팅 확대\*

\* ('18년 실적) 4,800건 지원 → ('19년 목표) 5,000건 지원

##### ③ CB사·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상권·업종정보 등을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('신정법」개정 추진)

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,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제외

\* 신용회복위원회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, 음식·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은 제외

□ 창업 실패자의 개인채권과는 달리, 기존에 존재해 온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부재

\*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('18.4월)되었으나, '18.4월 이전 법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없음

### 나. 대응 방안

①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(「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」('18.12.21일))

○ 개인(자영업자 포함)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

#### ※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방안

▶ (연체우려 차주)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'상시 채무조정제도' 도입

▶ (연체중인 차주)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을 대폭 확대('17년 29% → '22년 목표 45%)

▶ (변제능력 상실 차주) 일정기간(예 : 3년) 성실상환시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'특별감면제' 도입

## ②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실시

-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회사, 금융위·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, 채무조정 실시

### ※ 법인채권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지원 개요

- ▶ (대상채권)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,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(차주 기준)인 연대보증채권
  - ▶ (매입방식) 원칙적으로 캠프는 ‘업무협약을 맺은 금융회사·정책기관의 대상채권’을 일괄매입하되,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협약 기관의 채무자가 일괄매입 전에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 채권을 우선 매입
  - ▶ (채무조정)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및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 실시
  - ▶ (채무감면) 상환능력을 평가(연령, 연체기간, 소득 등 고려)하여 최대 60%(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%)까지 채무감면율 차등 적용
  - ▶ (불이익 정보 삭제) 채무조정약정 시 연체정보, 법원 결정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해제조치(요청)하며 채무조정자의 정상적 금융거래 회복 지원
- \* 지원대상, 지원방안, 채무자 신청방법 등 상세사항은 캠프가 추후 발표

## ③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“채무조정+재기자금지원”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

### ※ “채무조정+재기자금지원” 패키지 프로그램 개요

- ▶ (지원대상) 자영업 운영중 또는 폐업 2년 이내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\*
- \*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음식·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 포함
- ▶ (채무조정) 최장 3년 상환유예,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, 30~60% 채무감면
- ▶ (재기자금지원)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(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,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) 연계지원
- \* 신·기보 재기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
- ▶ (지원절차)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→ 재기지원위원회(신복위) 심의 →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절차 진행

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자영업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 심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
  - 실물·금융 여건 변화시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
-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업·임대업 등 담보 확보가 용이한 업종에 집중되면서 여타 업종 자영업자들의 금융접근에 애로 유발
-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통해 업종별 한도 관리, 부동산업·임대업 **RTI** 등을 시행 중이나,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

### 나. 개선방안

#### ①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·관리

-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

#### ②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편중 집중관리

- 쓸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여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

\*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

- ▶(현행)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
- ▶(개선) 자율적으로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정하도록 하되, 쓸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반드시 포함

- **RTI** 개선사항\*(18.10월 시행)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

\* RTI 기준미달 대출의 예외적 취급 제한, 임대소득 산정시 추정소득 활용 금지

## IV. 기대효과

- ① 카드사, 공공부문 등에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성,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 가능
  - 카드사, 공공부문 등에 축적되어 온 데이터를 금융권이 활용하게 됨으로써, 자영업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제고
- ② 자영업에 특화된 “총 2.6조원+α”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절감
- ③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이 원활
- ④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,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

## V. 향후 추진계획

추진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	소 관
<b>1.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</b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용조회회사 공공정보 활용 확대</li> <li>카드정보 여신심사 활용</li> <li>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 허용</li> </ul>	관계부처 협의 모범규준 개정 신청법 개정	'19년중 '19.2분기 '19년중	금융위 등
<b>2.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</b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저금리 대출</li> <li>카드매출 연계대출 마련</li> <li>사회공헌자금 활용 신·기보 자영업자 보증지원</li> <li>자영업자 컨설팅 확대</li> </ul>	상품 도입 상품 도입 신·기보 내규 개정 -	'19.1분기 '19.1분기 '19.1분기 '18.12월~	금융위 기은, 신·기보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
<b>3.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</b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</li> <li>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</li> <li>채무조정+재기자금지원 패키지</li> </ul>	신복위 협약개정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	'19.3분기 '19.2분기 '19.3분기	금융위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
<b>4.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</b>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</li> <li>특정업종으로의 편중 집중관리</li> </ul>	모범규준 개정 모범규준 개정	'19.1분기 '19.1분기	금융위, 금감원 업권별 협회